윤 대통령 "北핵·미사일,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 위협"

인도네시아 일간지 서면 인터뷰
"한국·아세안 비핵화 공조해야"
G20 참석 인도네시아·인도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달아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 합의와 약속이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아세안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지역 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하고,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한중일) 관계에 대해 "이제 한일중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 간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대(對) 아세안 지원 확대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투명성·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국 인태 전략의 협력 원칙인 포용·신뢰·호혜와도 맞닿아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이 되는 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최상의 시기"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는 대장동 몸통 조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가짜뉴스 악습 고리 끊어야"

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지난 대선을 겨냥한 '제2의 김대업·드루킹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했다.

또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브로커인)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게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후보가 부산저축은행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대장동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시키려고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하고 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조정실은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위원을 둬야 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제주 4·3중앙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원회 등 특수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년 위원을 위촉해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 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청년정책 분야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의 인력, 조직, 시설 요건이 명시됐다.

또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김의장, 이재명 찾아 법안 단독 처리 자제 요청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6일째 단식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자제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순리대로 못 가게 해서 이 대표님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 제게도 책임감이 있다"며 "날이 덥고 습하다. 습하면 더 견디기 힘들지 않느냐"며 건강 상태를 물었다.

이 대표는 "더운 거야 견디면 되는데 너무 미래가 암울하고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다.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도발하는데 한번 제지하면 어떨까 싶다"며 "요새는 달려드는 걸 넘어 일부러 도발하는 것 같다. 누가 시켰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서 오늘 (대정부질문 시작 전에)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한다. 원래 그런 말을 하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치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다. 국민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하고, 잘못한다고 보질 않는다"며 앞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2개 법안(간호법 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잇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조정작업을 해보려고 노력한다"며 "민주당에서도 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